

4·11 총선에 휘말린 과거청산

김수경(인권하루소식 편집인)

1. 들어가며

‘문민’ 정부라는 구호를 내걸고 나선 김영삼정부의 임기가 이제 말기로 접어들고 있다. 문민정부라는 말은 단지 대통령이 과거군사독재 정권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뽑힌 데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 진데 이제는 그 의미를 뺀다면 그 어디다도 문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상반기 인권상황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해 진다.

올 상반기도 여는 시기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지만 96년 상반기가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노 전대통령을 비롯한 12·12와 5·18 관련자의 처벌일 것이다. 세계의 눈이 쏠린 재판이자 불처벌의 대표적 사건인 5·18의 법적 심판은 인권운동은 물론 모든 사회 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사건임에 분명하다. 모든 진보적 운동의 발전이 이러한 과거 청산의 방향과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상반기 동안 큰 무게를 가진 것은 4·11 국회의원 선거였다. 그리고 선거를 거치면서 역사적 재판이라 떠들썩했던 그 사건은 자의든 타의든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고, 구속당시 가졌던 여론의 힘은 잠시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듯 96년 상반기 동안 국민들을 마취시켜 버린 4·11 총선은 바로 상반기 인권상황 평가에 중심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선거는 빠짐없이 공안광풍을 동반해 왔다. 소나기가 쏟아지기전 먹구름이 깔리고 눈을 뜰 수조차 없는 불어닥친 바람에 거리는 온통 먼지와 휴지, 빈깡통이 나뒹굴 듯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렸다. 그 속에 많은 문제들이 회석되고, 왜곡되고,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작년 하반기, 삭발한 채 명동성당에서 애간장 끓는 가슴을 움켜잡고 밤을 새가며 학살자 처벌을 외친 광주시민들, 교수·의료진·종교인 할 것없이 대한민국 모든 민주세력들은 5·18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생겨나고 5·18 특별법 제정과 전노 전직 대통령 등의 구속으로 이어져 갔다.

그러나 광주문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전원 처벌 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진행된 이 사건은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서 동면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2천여 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학살자는 밝혀지지조차 않은 채 개인적 범죄차원으로 축소·음폐되고 있다. 반성과 사죄를 전혀 모르는 피고인은 이 재판을 '정치적 차원의 보복'으로 맞받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지켜보는 이들이나 그 당사자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 구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을 믿지 않는다. 불감중에 걸려버린 듯 이제껏 범죄자들이 밟아온 것처럼 얼마 안가 '사면'으로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것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를 입막음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침해가 벌어질지 어깨를 움츠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자.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유행어처럼 퍼진 '삶의 질'은 이제 더 이상 건전한 시민운동의 용어만은 아니다. 지난 몇 년새 세계화·국제화라는 구호가 모든 문제의 화두가 되었듯이 4·11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정부를 비롯해 기업인, 정치인들 역시 선전전략용으로 '삶의 질'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중의 생존권은 그들이 말하는 삶의 질에 대상에서 벗어난 채 길바닥에 죽음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한겨울 살인적인 철거작업이 여기저기서 진행되는가하면, 핵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속되는 등 소외 받은 자들의 환경권, 생명권 투쟁은 감옥의 차가운 철창에 갇혀버렸다. 우리는 이렇듯 회석되어 버린 '삶의 질'이라는 말에 다시 확고하게 사회적 기본권의 쟁취라는 의미를 불어넣어야 한다.

한때 일부의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 직속기구인 노사개혁위원회는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출범시기 우려를 적중시키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만들어진 악랄했던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거 개발독재의 손에서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노동법 개정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변화하는 자본의 세계질서에 맞춰 노동착취 체계를 재편성한다는 의미밖에는 없는 듯 보인다.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가 어느 것하나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노사개혁위라는 합법의 틀을 이용해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청와대 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언제나 '개악'이었다는 한 노동계 지도자의 말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이제 노사개혁위원회는 세계변화 속에 우리 노동자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그럴싸한 말로 다시금 노동자의 목줄을 죄고 있다.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제, 해고정리제 등은 노동자를 개별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고도화된 자본의 공세 속에서 노사간의 대립은 하반기 노동투쟁의 접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반기도 계속적인 저항도 신평안정국이 진행되었다. 언론매체를 독점하다시피 한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역시 '선거용'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공안 사건이 넘쳐났다. 95년 12월 29명의 대량구속자를 낳은 범민련 사건, 부여 간첩 김동식 사건과 간첩을 만

나고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 혐의로 연루된 허인회·이인영 씨, 김동식이 지령과 무전기를 전달하고자 했던 박충렬, 김태년씨 등의 구속 사건은 야당 표를 깎아내는 효과를 심분 발휘하고도 남았다. 그후 계속해서 정부나 수사기관은 공공연히 '좌경척결, 불법 시위 근절'을 외쳤고, 이러한 강경 단속방침과 때를 같이 해 터진 조직 사건들은 학생운동이나 재야 운동을 위축시켰음은 물론 민주 사회의 기본어야 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계속 압박했다.

이러한 진보세력 목조르기 작업 속에서 우리사회는 자본주의의 치부인 물질만능주의와 사회에 대한 무관심, 개인이기주의등으로 혼탁해져 갔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상반기말 집중적으로 터진 성폭력 사건은 이 사회가 끝간 데 모르는 물질만능과 알팍한 성적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락의 길을 가는 길목에 있음을 드러냈다.

2. 주제별 인권 상황

1) 전노 재판과 '역사바로세우기'

① 전노 재판과 범국민대책위 활동

작년 하반기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범국민단일안의 발표 등은 5·18 특별법 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는 광주 문제 해결의 5원칙으로 ① 진상 규명 ② 책임자 처벌 ③ 명예회복 ④ 피해 배상 ⑤ 정신계승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노 전직 대통령등의 구속은 온 국민에게 흥분과 기대를 갖게 했다. 전 노의 재판은 김영삼 정부의 과거 청산 의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첫 공판이 지난 3월11일 열렸다. 당일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 12·12와 5·18의 총체적 진상 규명과 책임자 전원 처벌 △ 80년 국보위 참여 인사의 청산과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보법, 노동 악법 철폐 △ 5·18 관련자의 총선 출마 기도 중단 △ 최규하 전 대통령의 중단 촉구 △ 5·18 내란 학살을 공모한 미국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금까지 20여차례의 공판을 지켜보면서 과연 역사 바로 세우기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회의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진상은 밝혀졌는가, 그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았는가, 희생자들은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받았는가. 오히려 "광주 사태는 초기 진압 실패로 시민과 계엄군 측의 감정이 격화됨으로써 일어난 유혈극이다. 때문에 진압 직후 최규하 정부나 계엄사가 현지 지휘자에게 지휘 책임을 물었어야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피고인의 석방 문제까지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② 미국의 광주 개입 폭로

2월 초 미국이 80년 광주 진압에 개입했음을 알리는 <저널 오브 커머스>의 탐사록 기자의 기사는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미국 정부 문서들은 미국이 안보지상주의 시각으로 12·12전후부터 줄곧 전두환이나 정치 군부와 긴밀히 협조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카터행정부는 최고위 비밀 정책 팀을 만들어 80년 5월 7일 전두환씨의 군부대 투입 계획을 인지하고 5월 8일 이를 전두환 씨에게 통보하였고, 5월 22일 백악관 고위 참모 회의에서 전 씨의 광주 진압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는 5·18의 책임이 없다고 나섰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 측의 반성 없음은 물론 외무부 역시 문제의 문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③ 광주 항쟁 피해 사례 학술적 검증

16주기 광주항쟁 행사 기간인 지난 5월 25일 광주에서는 주목할 만한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5·18 민중항쟁 피해자 15년 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변주나(전북대의과대학 교수)는 1백31명 조사 결과 이들 피해자들이 지난 15년간 건강(입원, 사망), 가정(이혼, 별거), 직장(실직), 주거지역(도시에서 고향으로, 전세에서 셋방으로) 순등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나타낸 것을 비롯해, 피해자 군에서 비피해자군보다 6배가 높은 불안증과 3배가 높은 우울증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신체증후군치도 2.1배 높게 나타났으며, 총상 피해자(몇 명 확인요) 중 탄알 보유자 11.7%, 파편 보유자 11.7%, 파편과 탄알 보유자 23.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의 피해는 한 사람의 일생을 너머 가족사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는데 아직도 책임자는 심판대에 있지 않다. 법정에서 선 16명이 2천여 명이나 되는 광주시민을 학살했는가. 이들뿐 아니라 발표명령을 내린 사람은 물론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한 이들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공여지문제로 확산된 반미의식

미국의 광주 개입이 실제로 확인된 이후 국내에서 반미의 뿌리는 더욱 깊어져 갔다.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해 계속 싸워 온 한미행정협정 개정 문제와 함께 공여지 문제를 들고나섰다. 공여지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66년 주둔군 협정을 체결할 당시 아무런 보상 절차 없이 공여지로 사용한다는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주둔군협정에 따라 전용사용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제멋대로 제한하더라도 미군을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공여지의 정확한 면적은 알 수 없다. 더욱이 국방부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그러나 재산권 및 생명권의 심각한 위협인 이 문제는 많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쇠목 마을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 본부는 광주 학살 개입에 대한 미국의 공개 사과, 정부의 광주 문서 공개 및 진상 규명, 미군 범죄에 대한 사과 및 불평등한 한미행협의 전면 개정, 미군기지의 반환 및 사용중인 기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 사대 외교 청산등 강

올해초 노동부는 95년 산업 재해자 수(5인 이상 사업장)가 7만8천 34명(사망 2천 6백62명)으로 산재율 0.9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의 『94 산업 재해 분석』에 의하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임금은 낮으며 산재 발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월 3일 민주노총이 99개 소속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산재의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재해발생자 1만1백54명 중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가 무려 72.48%(7천3백60명)로 산재 보험 처리 재해자 2천7백94명에 비해 무려 3.63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94년 한해동안 조선업종 전체에서 34명 사망했으며, 95년에는 50명 사망 해 주일에 1명씩 사망하는 꼴이었다고 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4월 2, 3일 연이어 노동자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으며, 전남 영암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에서 한달 새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입는 중대재해 발생 등등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면서 작업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떠올랐다. 금속 연맹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6명의 노동자 사망하고, 3백30여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하며, 4명이 직업병에 걸리고 1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산재 예방은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무리한 작업 강요를 막을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④ 해결은 없이 인원만 추가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유입 5년.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15만명 이 중 8-9만 명이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작년 1월 네팔인 산업 연수생 10여명의 명동 성당 농성은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던져 주었다. 그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이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의 산업 재해와 의료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정부는 “저임 인력난 해소를 위해 2만 명에서 추가로 1만 여명의 산업 연수생을 더 들여오고, 이들의 연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해결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7월 7일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 취업자 수는 모두 16만7천5백63명이며, 이 중 59.8%인 10만1백48명이 불법체류자였다. 국내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 해 7월말 6만1천4백72명에서 불과 열 달만에 62.8%나 급증했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도 지난 해 7월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뒤 열달새 68%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냈다(한겨레신문 7월 8일자 참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 하반기에 3만 명의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을 추가 입국할 예정이어서, 연 말경에는 외국인 취업자가 2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초 발생한 오스만씨의 자살(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하루빨리 출국해야 했던 불법체류자 오스만씨가 불법 체류에

다른 2백만 원의 벌금이 없어 목매달아 자살, 93년 한 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징수한 벌금 액수 1백억3천만 원이라고 한다)에서 문제 제기된 벌금 제도나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 제도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하는 등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해 온 성남 외국인 노동자 집 등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이후 전개될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보인다. 지금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은 새벽3시에 자다 말고 일하는 등 하루 16시간 노동을 하고 월급 4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복지 정책의 현주소 ‘신연숙씨 사망 사건’

해를 넘기면서까지 정부는 OECD 가입을 목청껏 가입 의지를 외쳐 오더니 드디어 ‘연내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 면에서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은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94년 11월 삼성경제연구소 조사 결과 우리 나라는 OECD 가입한 25개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공교육비가 23달러로 23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5명으로 26위, 문맹률은 3.7%로 21위이며, 환자 1천명당 의사 수는 0.73명으로 26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보건 사회 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삶의 질은 세계 174개국 중 종합 평가 32위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GNP 사회복지 비율을 비교해 보면 94년 에 2%인데 반해 스웨덴(1992) 24.1%, 덴마크(1990) 18.7%, 미국(1992) 6.9% 등이다. 정부는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 및 복지 부문 세출 규모를 중앙 정부 전체 예산중 10%된다고 보사연은 발표했다. 이는 전문 학자들에 의하면 태국(10.4%) 방글라데시(12.3%)에도 못 미치는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세출 규모를 놓고 대체로 115위 수준으로 평가했다(시사저널 2월22일자 참조). 이러한 현실에서 OECD의 진출 여부만을 놓고 우리의 경제·문화·복지 수준을 얘기한다는 것은 숲은 접어 둔 채 나무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각 당의 사회복지 공약이 함량 미달이며, 각 당 공약의 단계별 추진 계획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20세기의 마지막 유엔 회의라 불린 제2차 세계 주거 회의가 지난 6월 이스탄불에서 전세계 1백30여개국 2천1백개 민간단체, 5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민간단체들은 그간 준비 회의를 통해 줄곧 “주거권의 문제는 단순한 주거나 주택문제가 아닌 삶의 공간 보장”이라며 토지의 공공성 주장하였다. 특히 “모든 개발과 계획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각국의 토지, 기후, 환경 등의 상황에 따른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해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민간위원회와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은 뜬구름뿐, 민간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국가 보고서, 입장 문서 등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몇 차례 요청을 했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비동맹국들과 미국·일본간에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큰 논쟁거리로 떠올랐으나 결국 한국 정부 역시 ‘주거권’을 합의하는 성과를 남기고 폐막되었다. 주거권(Housing Rights)을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범 지구적인 행동에 옮길 것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길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지난 2월 초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철거 과정에서 고공 철탑에서 불길을 피하다 숨진 신연숙씨 사건은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냉혹한 정부의 철거 의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다. 지난 2월 5일 새벽에 이어 계속되는 냉혹한 정부의 철거 의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다. 지난 2월 5일 새벽 경찰과 대치 중이던 강제 철거 감시 철탑에 화재가 발생해 철탑을 지키고 있던 주민 5명 가운데 불길 피하기 위해 18미터 아래로 몸던졌다가 신연숙(38)씨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씨의 남편 권정택씨는 당시 철거 용역 반원의 집단 구타로 척추를 다쳤고, 결국 신씨는 딸 둘(고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5학년)과 아들(7살)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다. 고공 철탑 농성 1백38일째 되는 날 이런 일 발생한 것이다. 「철거민 고 신연숙열사 학살 책임자 처벌 및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싸웠지만 수원 지검 신용간 검사는 긴급 구속된 호삼개발 관계자 6명 중 현장 개발 소장 한 사람 만에게 영장을 청구했을 뿐,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벌였을 뿐이다.

5) 국가보안법

2월 23일 김영삼대통령 출범 3주년 맞아 특별사면 복권 단행했다. 그러나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16년째 복역 중인 석달윤(62)씨가 무기에서 20년형 감형된 것 외에 양심수 완전히 제외하였고, 법무부가 5월 석탄일 맞아 6백71명 가석방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감옥에는 40년째 구금 중인 우용각(68)씨를 비롯한 20년이상 복역한 초장기수가 23명, 7년이상 복역 중인 장기수가 64명에 이르고 있다.

민가협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93년 2월25일부터 96년 7월10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9백45명이다. 이중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9백45명이다. 이중 국가보안법 관련자는 1백90명에 속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이 대부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등의 혐의였다. 이 부분에 대해 “그 행위들이 특별한 조건을 통하여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막연한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진다.

연도	93년	94년	95년	96년	합계
총구속자	195	775	623	352	1945
국보법	105	389	284	190	968

해가 갈수록 국가보안법에 대한 탄압은 사그라지기는커녕 더욱 잦아지고 있으며, 마치 뿌리째 뽑아 말려 죽이기를 연상케 한다. 지난 5월 7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 관계 장관 회의 열어 이후 발생하는 집단 민원인의 불법 시위와 학생 및 재야 단체 운동

들의 과격 시위에 대해 원천 봉쇄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집회에 공권력을 총동원할 뿐 아이나 컴퓨터 통신과 도서 등을 통한 이념 확산을 막고 가칭 학원대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이념 문제에 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정부 구호를 높이 외쳤던 과거의 재야 운동이나 학생운동은 문민시대 대중의 정서에 맞게 운동의 양상도 합법적 운동의 테두리 내에서 일반시민과 함께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국가 전복을 피하는’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 단체 구성·가입이나 고문·찬양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최근 몇 년사이에 발생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을 보면 여전히 대형 조직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① 박충렬씨 사건

안기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 박충렬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 당시와는 다르게 국보법상 고문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 지검 조성욱검사는 1월8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보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소지 탐독) 등의 혐의로 기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측 “이 질문은 공소사실과는 하등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합 통신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안기부와 검찰의 약점을 감추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4월 서울지법(유석원판사)에서 열린 박충렬씨 구형 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 국보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으로는 전례가 없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해 악의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는 7월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 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물증 없이 구속을 남발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② 사노맹

7월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호남위원회 재건 혐의로 6월초 구속되었던 이호성(28)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광주지법이 받아들이는 등 사노맹 ‘재건 기도’ 혐의로 구속된 재야 회원 10여명이 모두 풀려났다. 광주 지검 공안부는 당초 ‘재건 기도’ 혐의를 ‘동조’로 바꾸더니 사노맹이 94년 4월 공식 해체 선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동조 혐의마저 입증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시 ‘북한에 동조했다’는 식으로 공소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구속 수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한겨레신문 7월5일자 참조). 이러한 무리한 인신구속과 공소 내용 변경 등은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오래 전에 합법 출판된 『세계철학사』 『국가와 혁명』 등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문제삼았기도 했다. 5월 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 권순미씨 재판에서 검찰 국보법상 이적단체 가입과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 선고한 것이다. 이밖에도 사노맹 관련자들에게 과거 행적을 묻는 구속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③ 범민련

검찰은 범민련 강희남(76. 범민련 상임의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작년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20여명의 범민련 사건이 발표된 데 비하면 어처구니 없이 낮은 형량이다. 대부분 70세를 넘는 고령인 이들에게서 뚜렷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범민련 사건이 던진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무리한 구속수사로 인한 건수올리기, 사회 분위기 조장 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6월5일 범민련 강순정 씨가 범민련 간사와 함께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④ 기타

국가보안법 구속 사건에서 올 상반기에도 역시 학생 관련 조직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사회주의민주청년연맹 사건(9명 구속, 2명 수배) 서울대 노나매기사건(8명 구속) 민족민주학생연맹(군인 5명 구속) 사회주의학생연합(16명 연행) 전국학생정치연합(11명) 남측련 민족해방군(속칭 오월대)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6명 구속) 전국학생투쟁연합(3명) 전남대 출신을 중심으로한 자주대오사건(13명) 등등 정부의 좌경소탕 작전 발표로 더욱 활발해진 양상마저 보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 구성·가입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건은 이미 조직이 해체된 상태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취직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해마다 터지는 중부지역당 재건 사건이 올해 역시 터졌다. 1월 9일 중부지역당(남한조선노동당) 재건 혐의로 강원지역 활동가 김동규(29)씨등 9명 긴급 구속되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5명 무혐의 처리, 2명 국보법 위반 구속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4월 24일 13명이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한국노동청년연대(의장 이기주) 사건,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서형준(32. 직장인)씨를 비롯한 3명 사건 등이 터지지만 이들에게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해 조사 활동을 벌이고 간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52차 유엔인권위에 제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강력히 권고하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한 이유로 구속된 모든 구속자의 무조건 적인 석방과 사상전향제도 종식을 권고,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노동법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빌미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된 셈이다.

6) 주목해 볼 만한 판결들

▲ 95년 12월 16일 박중렬씨 접견 불허 취소에 대해 준항고 결정(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이 내려졌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

의 인권 보장과 방어권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행정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사 기관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6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판결했다.

▲ 1월 25일 대법원은 97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보증금납입부 피의자 석방 제도' 시행 방안을 9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나 증인 등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일정 보증금을 내면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로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 3월 5일 서울 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판사는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 연장)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다. 이때 현재는 "국보법 제7조(찬양, 고무)와 제10조(불고지)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국보법 제19조의 구속 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 추정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 6월 21일 즉심피의자를 경찰서안 대기실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즉결심판의 피고인인 경우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서 즉결심판자대기실에 유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을 받을 때까지 10시간 가량을 즉결심판자 대기실에 불법 감금한 것은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상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 5백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7)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①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사망 사건

도시 환경 미화를 이유로 벌어진 아암도 노점 철거 작업중 이덕인(당시 28세)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지난 연말 발생했다. 장애인 노점상, 빈민 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측이 '타살'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덕인 씨의 사인에 대해 종교·사회단체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팔과 손목에 묶인 줄이 포박의 형태라는 점 ▲익사체로 보기에 는 등쪽에 아무런 상처나 이물질이 없는 점 ▲입고 있었던 옷옷들이 벗겨 없어진 점 ▲사망 추정 시간이 명확치 않은 점등을 들어 '수영중 사망'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에 체포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죽음을 '자살'로 규정한 채 사건은 호지부지 되

고 힘겨운 싸움 속에 뚜렷한 성과 없이 이덕인씨는 다섯 달 가까이 냉동관에서 지내다 결국 4월 24일 장례식을 치게 된다.

②경찰 과잉 진압에 따른 노수석 사망 사건

지난 3월 29일 '대선 자금 공개'와 '교육 재정 확보'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 과정에서 노수석(연세대 2년)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국 학생 고 노수석추모 및 김영삼정권 살인 폭력 진압 대책위」는 4월 2일 진상 조사 결과 “경찰의 폭력 진압 과정에서 전경들의 구타와 최루탄 피폭,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검거위협 속에서 심폐기능의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 뒤 현정권의 혐 속에서 심폐기능의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 뒤 현정권의 살인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국민대회등을 통해 △김영삼정권의 심판 △경찰 책임자 처벌 △평화시위에 대한 살인 폭력 진압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김영삼대통령의 공개적인 사과 촉구 △92년 대선자금공개와 교육 재정 확보 등을 요구하게 된다. 4월 8일에는 노씨의 아버지 노봉구씨가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위 진압 지휘중대장등 상해 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평화적 시위에 대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야만적 체포 작전을 감행한 경찰 책임자들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4월 13일 서울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노씨 최종 사인을 심장 이상에 의한 돌연사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심장조직등 정밀 분석에서 구타와 관련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노씨의 목과 가슴 등에서 발견된 피하출혈 흔적은 심폐소생술 등에 의해 생긴 것”이라 결론 내린다. 하지만 부검결과 드러난 노씨의 외상부분 및 노씨의 구타 사실을 증언한 목격자 진술 내용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당시 시위는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시위였고 현재까지 경찰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국과수의 감정 증거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노수석씨의 죽음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③ 고애순씨 사산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된 여성 수감자의 처우 개선 촉구

작년 12월 4일 광주전남경찰청 보안 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임신 8개월에 구속되었던 고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 범민련 사건)씨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4일만에 태아를 사산했다. 그는 반국가 단체인 범민련에 가입, 활동했다는 혐의로 연행 구속되어 구속집행정지 때까지 약 2개월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고씨 사건을 계기로 여성·재야·인권단체들은 한겨울 임신부를 수감하고, 검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교도소 내의 여성 수감자의 모성 권리 보장 촉구했다. 또한 SOS-Torture등 각국 인권 단체들도 고애순씨 사건에 항의하며, 적절한 의료 조치 취할 것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형법을 국제법 수준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8) 여성

지난 5월 6일 새벽1시경 경기도 안산시 주택가에서 강순덕(34)씨 30대 남자에게 폭행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했으나 주민들 알고도 목살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죽음조차 방관하는 냉담한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의 희생자는 어느 계층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 어린이 등이라는 생각이 든다. 올 상반기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살펴본다.

① 가정폭력방지법

한국 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발표에 따르면 연간 1만5천여 건의 상담 가운데 아내 구타 문제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51.21%가 아이들도 구타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해자중 50.6%가 구타 가정에서 자랐다는 통계는 가정 폭력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5월 2일 지속적으로 구타당하는 딸을 보다못해 동거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상희(73) 할머니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6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여성정책심의회를 열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아닌 행정 조치를 통해 가정으로부터 퇴거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발표가 나가기 무섭게 정부는 가장 핵심 사안이 퇴거명령제를 삭제해 비난을 샀다.

② 성폭행사건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발표에 따르면 1-6월 성폭력상담 6백11건 가운데 성폭행이 3백8건, 성추행이 2백85건을 차지했다. 50.4%를 차지하는 성폭행을 보면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2백2건으로 일반강간의 33.1%를 차지했으며, 성추행의 경우도 일반 성추행 중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1백77건으로 29%를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중 청소년 1백33명(21.8%), 어린이 1백34명(21.9%) 유아 69명(11.3)의 순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여학생 성추행, 성폭행사건은 경악을 떠나 공포감마저 들게 한다. 지난 5월에는 신양중학교 교장 황수연(55)씨가 여학생의 성추행 사건, 성폭행을 당한 뒤 두려움에 사실을 감춘 한 여중생이 결국 학교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지는 가하면, 소녀 가장인 초등 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20차례나 성폭행당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채 자살하는 사건 등등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터졌다. 그러나 이런 일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기 보다는 감춰진 일들이 이제야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폭력근절을 위한 인식개선등 다방면의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③ 정신대

지난 1월 24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어온 정신대 할머니들의 시위가 2백회를 넘어섰다. 지난 4년 동안 이들은 ▲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 규명 ▲정부의 공식 사과 ▲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배상 ▲범죄자 처벌 등을 주장해 왔다. 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여성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씨가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책임질 것” 촉구하는 등 국제 여론이 강력해 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그저 사과만을 하고 있을 뿐 여전히 민간위로금을 운운하고 있다. 도츠카 변호사는 “현재 대만 정부는 일본을 향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민간 기금이 아닌 일본의 사죄와 확실한 배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도 더욱 강한 입장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점에 정부는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일본 총리의 면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9) 기타

부산지법 형사1단독(배광국 판사)은 강주영양 유괴 살해 사건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경찰서 허금진 경장등 3명의 선고 공판에서 허씨에게 독직 폭행죄 적용해 징역1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법원의 고문 근절 의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95년 초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고문근절의지를 보였다지만 아직까지도 신문지상에는 ‘철야조사’라는 말이 버젓이 등장하는 데, 여기서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피의자 진술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6월 13일 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 뇌물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제기되었다. ‘과학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국립과학연구소와 진술에 의지하는 재판은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을 만들어 냈다.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재차 등장하는 김기웅순경 사건 당시 국과수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올 들어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요구하면 자살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다. 6월 2일 새벽 2시 25분경 대구시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15층 옥상에서 정기 휴가 나온 이현우(육군. 20) 일병 이 병영 안에서의 폭행근절을 요구하며 자살했고, 다음날 서울 경찰청 제2기동대 이상범(19) 일병이 영내 기합 중지를 요구하며 자살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91-95년 5년동안 일어난 구타 사고는 모두 3천1백46건으로 연평균 6백29건 기록(사망 사건 26건)했다고 한다. 육군본부가 최근 발표가 91년-95년 범죄 통계를 보면 구타로 인한 사고가 92년 한 해만 줄었을 뿐 93년 5백86건, 94년 7백2건, 95년 9백93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에 2.7건의 구타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또 한 5월 16일 정아무개(13)군동 10대 가출 청소년 6명 감금당한 채 불에 달군 연탄 집게, 작업용 연장 따위로 맞으며 일하다 탈출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의 인권은 안전한가.

1월10일 시민 오태근 씨는 수원 오산 파출소로부터 연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방광등 파열되었다. 그리고 6월 8일 한 시민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하다 폭행을 당했다. 동행을 요구하는 의경은 자신의 신분은 물론 동행 목적, 동행장소를 전혀 안밖했으며, 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 버렸고 관할 경찰서측은 폭행의경을 찾는 데 나서기는커녕 관내 소속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발뺌하기에 바빴다. 정부의 인권보호 의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① 학생 시위

노수석 씨의 죽음이후 일련의 학생들의 죽음, 분신 사건은 학생들의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낳았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항거하게 했을까.

지난 4월 7일 성신여대 권희정(총학생회 정책실장) 씨가 학자단식 끝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4월 16일에는 성균관대 황혜인(물리학과 95) 씨가 온몸에 신너를 뿌리고 분신 사망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여수수산대 오영권(21. 식품공학과 95학번) 씨가 “김영삼 타도! 미제 축출! 조국통일만세!”라고 쓴 글을 남기고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타살인지 자살인지조차 규명되지 않은 채 대구공전 동아리연합회 조직국장 박동학(92학번)씨가 동아리연합회 자치권 인정을 요구하다 숨졌다.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서 박승희 열사 등의 죽음으로 ‘분신정국’을 몰고 왔던 90년을 연상시킨 올해 사건들은 그 당시와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죽음이 현실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되지 못한 채 잠잠히 사그라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것은 경원대 사태라고 할 수 있다.

② 경원대

학교 당국과의 싸움 5년째.

지난 3월 20일 현재 96년 들어 2명 제적, 6명 무기정학, 7명 고소 고발된 상태였다. 96년 학자 싸움의 도화선이 된 것은 장현구(당시 27세, 경원대 제적)씨 분신이다. 92년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지낸 그는 학내 문제로 학교측이 학생회 간부 10여명을 폭력, 방화,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50여명을 무더기 징계할 때 고소등 징계 조치 당했다. 같은 해 성남 경찰서에 연행되어 불법 수사를 받았고 그 뒤 감옥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으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분신 직후 성남 지역 재야 단체와 경원대 총학생회, 동문들을 중심으로 ‘사학비리, 경찰고문 희생자 고 장현구군 장례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 규명과 고문 경찰, 당시 장씨를 폭행한 교수들의 보직 해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경원대 측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징계-> 고발-> 구속’의 악순환을 반복했을 뿐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4월 6일 진철원(20·도시계획과 2년)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태는 악화되고, 총학생회 측은 전체 학생 투표 통해 전면 수업 거부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뒤로도 경원대측은 협상을 제기해 놓고도 고발하는 등의 이중

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5월 3일 현재 올해 만에도 학내 문제로 18명 고발, 17명 징계당했다. 휴업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폭력배까지 등장해 위영석 총학생회장 목뼈 부상을 입기에 이르렀고, 학생회 측은 '마지막 카드'인 재단비리 폭로를 버리고 있는 등 최후의 일전으로 치닫고 있다.

3. 글을 마치며

앞에서 대략 살펴보았듯이 96년 상반기는 구체적 사안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기보다 아직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냉동관에서 5개월의 싸움 끝에 결국 이덕인씨 사인규명 작업은 시간 속으로 묻혀버렸다. 5년을 넘게 끌어온 경원대 사태는 소강도, 침체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잊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노 전직대통령을 16명의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세웠으나 몰새듯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이러한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반기를 준비하는 때이다. 12·12, 5·18사건의 법정 규명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처럼 범죄자들의 범죄사실의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또한 이제껏 몇 년동안 거듭 싸워온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허용과 같이 진행될 것을 보이는 노동법 개악 움직임이 노·사·정간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97년 연말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해와 유사하게 공안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행될 탄압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바람에 따라 눕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풀잎처럼 강인하게, 서로의 허리를 부둥켜안고 내일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자.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펴낸날 · 96년 9월
펴낸이 · 서준식
펴낸곳 · 인권을통사랑방

주소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5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인터넷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값 1만5천원